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이날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목적 맞는 예산 편성 필요해”

도의회 예결위, 올 1차 추경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11일 전라북도의 2020년도 제1차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물었다.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코로나19’ 추경을 추진하기 전에 집행부와 도의회의 사전협의 및 조율이 부족했음을 이야기하고, 의회는 이미 2월 회기 때 업무보고 취소, 축소 등으로 방역활동을 지원했으나 집행부의 의회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해 의회를 거수기 역할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명분이 코로나19 대응이나 이러한 긴급목적의

수요 외 예산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지난 20년간 3월 추경이 한 번도 없었으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목적 외로 지난 분 예산 심의 때 부결된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긴급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의회 승인 받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대응만을 위한 예산이라 홍보가 됐으나 그와 별개인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예산이 아니면 2차 추경으로 미루거나 2차 추경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8)은 “WHO에서 펜데믹이라는 용어의 사용,

세계중시 68조 증발 등으로 정부에서도 11조7천억 규모의 추경을 추진할 정도로 경제살리기가 중요해 보이며, 이번 추경도 민생회복과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필요하나 정작 보건·의료가 전체예산의 1.9%로 전국 평균 2.1%보다도 적고 미비한 수준으로, 여기에 다수 의원들의 의구심과 질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가 코로나 전에 고민하던 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음을 상기시키고, 그때 예산 편성을 모른게 ‘인구감소’로 설명하려 했듯이 이번 추경은 모두 ‘코로나19’로 포장하려 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도가 제일 먼저 추경을 했다는 사실 보다는 무엇을 했다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도민 마음에 외닿는 추경안 편성이어야 하며, 그를 통해 위기감 해소, 도민 마음 달래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적극 환영”

정동영 예비후보, “별도로 정부 추경 100억원 반영 요청”

정동영 21대 총선 전주(병) 예비후보가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와 별도로 정부 추경예산의 100억원 전주시 반영을 요청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11일 국회에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50억원,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추경예산 전 주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고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 원을 지원한다.

정 예비후보는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전국 최초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IMF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이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지원법, 착한임대인법을 공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착한임대 운동의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집주한 욕망을 및 전통신장, 상점가 등 영세 소상공인 및 임차인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함이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주가 착한임대인 운동이 최초로 시작되는 등 시민분들이 자발적인 힘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 왔다”며, “시민분들이 힘들 때 정부와 정치권이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생당 차원에서 추경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김윤덕 “소상공 돕는 포용금융 지원 전담기구 설립”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전주갑)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김윤덕 예비후보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매우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지역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을 살려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소상공인 관련 공약으로는 먼저 ‘소상공인을 돕는 포용 금융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남, 광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용 금융’은 지방 금융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들과 협약을 맺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자문과 신용등급에 따른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컸던 회계, 세무처리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취재반



최형재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조속 지급을”

무소속 최형재 예비후보(전주을)는 11일,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을 살립니다!’라는 3번째 캠페인을 통해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 실업자 등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실행할 것을 전주시와 전북도,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한 바 있었다”면서 전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시의 250억원 규모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환영했다.

전주시의 결정에 대해 그는 “금융지원이나 상품권 지급보다 재정에 의한 직접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전주시정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조려와 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특별취재반



김성주, 국제금융도시 실현 6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전주병)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전주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실현 공약으로는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전주 이전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개설 등 금융 생태계 조성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전주글로벌 별경제금융포럼 개최 ▲글로벌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연금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이다.

김성주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1000조 시대, 전주를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국제금융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한민국 금융 트리아앵글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조배숙, ‘1천만 익산관광시대’ 비전 제시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익산을)는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1천만 익산관광시대’ 비전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11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1천만 익산관광시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익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백제역사문화, 보석, 식품의 3대 명품도시인 익산에, 환경의 보고인 만경강과 철도 역사(歷史)를 더해 익산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천혜의 생태습지와 철새도래지를 품은 만경강 춘포지구에 만경강 국가정원 조성, ▲미륵사지와 왕궁리 백제유적을 잇는 세계유산길 조성 및 가상현실 등 체험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세계문화유산 관광벨트 구축, ▲연간 200만 관광객이 찾아올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 ▲체험형 보석산업을 육성시킬 ‘보석마을’ 조성 등을 1천만 익산관광시대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도청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도입 신중 기울여야”

두세훈 도의원, “도민 접근권리 제한 성격 있어”

전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전라북도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도청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도입 여부를 놓고 부작용 검토 등을 철저히 진행해야 함을 주장해 이목을 끈다.

두세훈 의원은 “도청 청사에 스피드게이트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민의 상시 민원에 대한 접근권리



제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도입 전 공청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여론수렴을 우선해야 하며, 도민의 민원 접근 권리 제한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 공청회 개최, 도의회의 의회소통 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두 의원은 “현재까지 스피드게이트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련 민원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열린 청사가 아닌 닫힌 청사, 불통 청사로 낙인찍혀 도민

들의 불신만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청사 내로 홍기를 소지한 민원인이 침입하는 등 위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당성 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두 의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회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피드게이트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예비비는 예측되지 않는 긴급재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스피드게이트 도입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보기에 본 예산을 세워 진행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뜻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 KakaoTV | NAVER TV | Daum | NAVER |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 Btv ch.285 |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